



금성당·사머니즘박물관에서 지난해 열린 '금성당제' 모습

유교 제례+무교 굿 '금성당제' 열린다

내일 은평 금성당·사머니즘박물관서

서울 은평뉴타운 아파트촌 한복관에 자리한 '금성당·사머니즘박물관'에서 16일 유교식 제례와 무교식 굿이 혼합된 '금성당제'가 열린다.

이 박물관은 본래 조선 후기 굿당의 모습을 간직한 한옥이었던 것을 지난 2016년 5월 무속유물 전문 박물관으로 재탄생시킨 곳이다. 개관 이후 매년 한 번씩 박물관의 전신이었던 굿당 '금성당'이 주신으로 모신 금성대군을 기리는 금성당제를 열고 있다.

'금성당'이란 명칭은 '금성대군'(1426~1457년)에서 유래한다. 금성대군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 심씨의 여섯째 아들로, 단종의 숙부인 동시에 세조의 아우다. 세조가 어린 조카인 단종을 핍박해 여러 곳에 유배를 보내는 과정, 금성대군은 단종 복위를 계획하다가 결국 사사됐다. 과거 단종의 유배지 중 하나였던 영주 등에서는 금성대군의 충의를 기려 대동놀이가 매년 치러지고, 그를 신으로 모시며 마을 곳곳 금성당을 짓고 당굿을 행한 바 있다.

양종승 금성당·사머니즘박물관장은 "금성당제의 전통은 이 땅에 불교, 기독교, 도교, 유교 등의 외부 종교들이 유입

되기 전부터 우리 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려져 왔다"며 "그러면서 한국인의 종교심성 또한 잘 간직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례와 문화예술로 승화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16일 오전 9시께부터 시작되는 금성당제는 오후 5시까지 이어진다. 오전에는 ▲황토물림 ▲유교식 제례 ▲금성대왕신 맞이 등을, 오후에는 ▲서낭맞이 ▲금성왕굿 ▲단춧굿 등을 선보인다. 황토물림은 박물관 건물인 금성당 담장 네 귀퉁이에 금줄을 쳐서 해로운 기운의 유입을 막는 의식이며, 서낭맞이는 마을수호신의 뜻인 서낭을 모시고 전염병을 막고 지역민의 대동단결과 무병장수를 발원하는 절차다. 단춧굿은 민족시조인 단군신에 이어 고려 충신 최영장군 등을 모시는 곳이다.

양 관장에 따르면 금성당 건축물은 150여년 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조선시대 궁중에서 후원해 건립된 무속신당 중 오늘날까지 본디 터에 옛 모습 그대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신당이다.

양관장은 "금성당·사머니즘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신앙 유물은 한민족 역사와 문화를 살피게 하는 귀중한 문화유산의 자료일 뿐만 아니라 세계화 속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진정성 담긴 한민족의 문화재"라고 설명했다. /오진희 기자 valero@

몰려드는 관광객에 주민피해 북촌한옥마을 '쉬는 날' 지정

서울시, 주민피해 개선대책 시행
북촌로 11길 평일·토요일만 통행
지킴이 양성... 출입 제한 등 계도

서울시가 '관광 허용시간'을 도입해 북촌한옥마을 지키기에 나선다.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 시간에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주민 피해를 줄이고 정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북촌한옥마을 주민피해 개선 대책'을 내놨다고 14일 밝혔다.

대책안에 따라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북촌로 11길은 평일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에만 통행할 수 있다. 일요일은 '골목길 쉬는 날'로 지정돼 관광이 금지된다.

시는 우선 주민 주도의 관리 인력을 투입해 홍보·계도 활동을 펼친다. 향후 자율시행 효과를 분석, 이를 토대로 시간대를 조정하고 의무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단체관광객은 가이드가 동행하도록 해 관광 에티켓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끈다. 시는 '마을관광해설사' 등의 관리인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복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스1

력을 지원한다. 특정시간대에 단체 관광객이 집중되지 않도록 사전 예약제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북촌한옥마을 인근의 교통정체를 막기 위해 주 출입구인 돈의미역 주변에 불법주정차된 관광버스를 집중 단속한다. 관광버스 승하차장을 지정해 단체관광객을 도보관광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북촌한옥마을 일대를 '집중청소구역'으로 설정해 쓰레기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쓰레기 수거횟수를 현행 1일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환경미화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전담 청소인력 2명을 상

시 투입해 골목길을 청소한다. 관광객의 노상광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70곳인 개방·나눔화장실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주민으로 구성된 관리인력 '북촌마을 지킴이'를 양성한다. 지킴이들은 관광 허용시간 이외 시간대에 관광객의 마을출입을 제한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 등 금지 행위를 계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와 관련회 시와 구는 오는 22일 주민 토론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안을 최종 확정해 7월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128억 '작통 골프의류' 제조·유통업체 적발

온라인서 33개 업체에 '위탁판매'
서울시, 상표법 위반 혐의 입건

국내에 유통되는 작통 골프의류의 80%를 제조·유통해왔던 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중국에서 128억원 상당의 작통 골프의류를 제조해 국내에 유통한 업주 A씨(42)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압수된 위조품은 총 8396점(정품 추정가 22억원)이다. 대포통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결과 확인된 거래액만 14억원(정품추정가 106억원)에 달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피의자 A씨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분석해 중국 공장의 위조품 공정 동영상과 통화녹음을 확보했다. 원단값과 공임(인건

비) 등 제조원가를 직접 지출한 정황도 확인했다.

피의자 A씨는 중국에서 생산한 위조품을 카카오톡, 밴드 등 온라인을 통해 전국 33개 업체에 '위탁판매 방식'으로 유통해왔다.

피의자는 또 중국산 위조 신발에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라벨을 부착하고, 중국산 벨트에는 '메이드 인 재팬(Made in Japan)'을 새겨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했다.

판매상품을 '정로스(정품 로스·흠집 상품)'로 속여 팔고, 유명법인 대포계좌와 대포폰을 이용해 가짜주소를 반쯤 주소로 내세우는 등의 수법으로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온 정황도 확인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상표법 위반행위를 본격 단속한 지난 2012년 이래 상표법 위반 사범 773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를 통해 총 12만5046점, 정품 추정가 439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해

폐기했다.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상표도용, 원산지 위반, 불법 다단계, 대부업, 식품, 보건 등 12개 수사 분야에 대한 범죄행위 신고·제보자를 대상으로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범죄 행위 신고는 민생범죄신고 앱(서울 스마트블라인드), 서울시 홈페이지, 다산콜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안승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브랜드 상표 위조는 상거래 질서를 저하시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건전한 국내 관련 산업 발전과 국가 대외신인도를 악화시키는 불법 행위"라며 "지속적인 첩보 활동과 수사를 통해 중간업자, 위탁판매 업체까지 수사를 확대해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돌고래의 '발리 슈'

14일 세계인의 축구 축제 '2018 러시아 월드컵'을 기념해 서울 강남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벨루가가 수조에서 축구공을 가지고 놀고 있다. 축구공을 수조에 넣은 것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내 동물들의 야생 습성을 잃지 않도록 다양한 행동을 유도하는 행동 풍부화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연합뉴스

서울 추진사업 담은 '서울백서' 발간

서울시는 오는 15일 지난해 추진한 정책 중 주요 사업 100개를 담은 '2017 서울백서'를 발간한다.

백서는 시정 분야를 안전한 도시, 따뜻한 도시, 꿈꾸는 도시, 숨 쉬는 도시, 열린 도시의 5가지 분야로 구분하고, 분야별로 주요 사업 100가지를 소개한다.

백서에는 다시·세운 프로젝트, 문화비축기지 등 서울시의 도시재생으로 탄생한 시민 공간과 유아시설 도시철도 개통, 다람쥐 버스 운행, 서울형 생활임금

제 시행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혁신 정책이 포함됐다.

도입부에서는 시민이 뽑은 '2017년 서울 10대 뉴스'를 통해 지난해 시민들의 공감을 얻은 정책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백서의 마지막 부분은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유익한 제도들을 소개한 '2018년 달라지는 서울생활'과 그동안 서울시에서 발행한 백서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백서로 찾아보는 서울시정'으로 구성됐다. /김현정 기자

"bhc본사, 위반 여지 있어"... 재조사 요청

점주들, 세종 공정거래위서 집회

치킨 프랜차이즈 bhc의 점주들이 14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집회를 열었다. 지난달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총회 후 2차 집회다.

이날 전국 bhc 가맹점 협의회는 "(bhc)본사가 가맹점법 위반행위의 여지가 있다"고 말하며 공정위의 재조사를 요청했다.

협의회는 "지난 2015년부터 가맹본부는 '광고비'와 '가공비'라는 추가 비용을 붙여 가맹점에 공급했다"며 "외부에 노출

되면 곤란한 가공비 200원을 기존 광고비 200원에 포함해 광고비 400원으로 구성해 신신료 한마리마다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본사 정보공개서에 광고비 미징수 표기,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로 발급한 행위 등에 문제가 있다며 조사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사모펀드에서 운영하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를 본사의 수익성을 위한 도구로 취급한다"며 "가맹본부가 원·부재료를 최대한 싸게 사서, 가맹본부

에 비싸게 공급했다"고 말했다. 이날 가맹점주들은 점포의 매출원가율이 42%를 초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관측물품 비용을 가맹점에 부담시킨 행위 ▲점포 신규 개점 시 상권 쪼개기 ▲가맹점 휴무 운영시간 통제 ▲내부 게시판 글 전체 삭제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수익구조와 제품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의 인식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바로 잡지 않으면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며 "외국계 사모펀드가 재매각에 나서면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장치도 없어 무기력하게 피해를 볼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